

놀라운 적중률, 점수가 나오는 선행정학 모의고사

2025 김종규 선행정학

ALLPASS 모의고사

지방·서울 7급

문제편

PREFACE

2025 올패스 모의고사 선행정학 지방·서울 7급을 펴내며

2025 올패스 지방·서울 7급 동형모의고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첫째, 철저히 2025 지방·서울7급 시험에 출제경향과 난이도를 맞추어 16회분 문제를 엄선하였습니다.

둘째,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실전에 충분히 대비될 수 있도록 시의성이 약간 떨어지거나 지나치게 지엽적인 문제, 오래된 문제 등은 배제하고 출제 가능성이 높은 신경향 문제 위주로 분량을 일부 줄였습니다.

셋째, 최근 개정된 각종 개정법률(「정부조직법」, 「공무원노조법」, 「공공기관운영법」, 「지능정보화기본법」 등)은 물론, 지방자치 관련 법령(「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 「주민조례발안법」 개정내용과 최근(2023.7.) 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정책방향과 추진체계 등을 완벽하게 반영하였으며, 최근 고난도 법령문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다양한 신경향 법령문제와 신경향 이슈(재정준칙, 통합재정, 넋지이론, 공공가치론, 국가부채 등)를 개발·수록 하였습니다.

넷째, 최근 개정법령이 많아 원칙적으로 모든 문제를 지방7급 시험일(2025.11.1.) 기준으로 편집·구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수험생들의 요청으로 올해에는 강의(5주 예정)도 개설될 예정이니 강의를 수강하시면서 학습하신다면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7급 동형모고문제와 90%는 중복되지 않으니 국가7급 동형모고를 기본으로 풀어보신 후 지방7급 동형으로 신경향 문제와 지방7급에 최적화된 문제들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학습하시면 마무리 효과가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부디 이번 2025 지방·서울7급 동형모의고사 선행정학으로 막바지 더위를 잘 이겨내시고 다가오는 금년도 마지막 시험인 지방·서울7급 시험에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 바쁜 가운데 교정에 힘써준 제자·조교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 참고로 해설편 별표(★) 개수는 난이도가 아닌 중요도 표시임을 알려드립니다.

2025. 07. 25.
카스파 연구실에서 저자

김중규

CONTENTS

PART

문제

제01회 모의고사	10
제02회 모의고사	16
제03회 모의고사	22
제04회 모의고사	28
제05회 모의고사	34
제06회 모의고사	40
제07회 모의고사	46
제08회 모의고사	52
제09회 모의고사	58
제10회 모의고사	64
제11회 모의고사	70
제12회 모의고사	76
제13회 모의고사	82
제14회 모의고사	88
제15회 모의고사	94
제16회 모의고사	100

2025년 11월 1일 시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행정학

응시번호	
성명	

문제책형
가

【시험과목】

제1과목	국 어	제2과목	헌 법
제3과목	행 정 법	제4과목	행 정 학
제5과목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선택		

응시자 주의사항

-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나 시험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의거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 답안지 책형 표기는 시험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문제책 앞면에 인쇄된 책형을 확인한 후, 답안지 책형란의 해당 책형(1개)에 "●"와 같이 표기하여야 합니다.
- 답안은 반드시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선택과목의 경우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을 선택하여 답안을 표기하거나, 선택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응시표에 기재된 선택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를 주의 깊게 읽은 후,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정답을 고르며, 문제내용에 관한 질문은 하실 수 없습니다.
-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하거나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 수정할 수 있으며(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눌러주어야 합니다.
-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과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문제책은 시험종료 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제1회 모의고사

01

다음 중 연구조사방법론에서 사용하는 타당성(Validit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렴적 타당성은 동일한 개념을 다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했을 때 측정된 값 간의 상관관계를 의미한다.
- ② 차별적 타당성은 서로 다른 이론적 구성개념을 나타내는 측정지표 간의 관계를 의미하며, 서로 다른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지표 간의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차별적 타당성이 높다.
- ③ 기준타당성은 하나의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측정한 결과를 비교했을 때 도출된 연관성의 정도이다.
- ④ 내용타당성은 특정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 능력요소를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느냐를 의미한다.

02

「행정규제기본법」의 내용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기술 서비스·제품을 규제할 때에는 규제로 인하여 제한되는 권리나 부과되는 의무는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그 밖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규정방식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② 규제개혁위원회는 신산업을 육성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신산업 분야의 규제정비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신기술 서비스·제품을 규제할 때에는 출시 전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④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03

정부의 정책수단(policy tool)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 ㄱ. 공기업과 경제적 규제는 정부의 직접수단에 해당한다.
- ㄴ. 조세지출은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수단에 해당한다.
- ㄷ. 바우처는 역사가 길고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수단이다.
- ㄹ. 베팅(Vedung)은 강제성의 정도의 따라 정책수단을 규제적 수단, 종교적 수단, 경제적 수단으로 구분하였다.
- ㅁ. 바우처, 보조금, 공적 보험, 사회적 규제 등은 직접성이 높지 않은 정책수단으로 거버넌스의 출현과 함께 강조되고 있다.

- ① ㄱ, ㄴ, ㅁ ② ㄱ, ㄷ, ㄹ
- ③ ㄴ, ㄷ, ㄹ ④ ㄷ, ㄹ, ㅁ

04

지방재정조정제도 중 「지방교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은?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소방인력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 ② 보통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한다. 자치구의 경우도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와 별도로 교부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교부세의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 ④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전액을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

제16회 모의고사

01 M.Weber의 이념형 관료제모형의 특성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르면?

- ㄱ. 권한의 유형을 전통적 권한, 위광적 권한, 법적·합리적 권한으로 구분하고 그 중 법적·합리적 권한에 기초하여 이념형 관료제를 제시하였다.
- ㄴ. 권한은 직위가 아니라 사람에 부여되며 관료들은 규칙상 직위담당자로서 직위와 규칙에 충성을 바치기 보다는 개인적 충복으로서 상급자에게 책임을 지고 충성해야 한다.
- ㄷ. 관료들의 채용기준은 전문적·기술적 능력이 아니라 정치적 능력과 보상이다.
- ㄹ. 권력관계의 사회화를 통하여 권력의 망을 형성하고 사회의 적절한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관료제는 스스로를 항구화한다.
- ㅁ. 모든 직위의 권한과 임무는 문서화된 규칙으로 규정되며, 임무수행의 비개인화를 유지한다.

- ① ㄴ ② ㄷ
③ ㄴ, ㄷ ④ ㄴ, ㄷ, ㄹ

02 공무원 보수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 ① 고정급적 연봉제는 정무직 공무원에 적용되며 기본연봉만 지급되고 성과연봉은 지급되지 않는다.
- ② 연봉제는 목표의 전환을 방지해 주며 우리의 경우 3급 이상에 적용되고 있다.
- ③ 직무급은 직무중심의 합리적이고 공평한 보수제도이며 직무의 성과를 반영할 수 있다.
- ④ 보수수준 결정시 고려해야 할 경제적 요인이란 보수수준의 하한선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인이다.

03 우리나라 지방세제의 원칙과 문제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세목자체의 수가 적지는 않으나 세원이 근원적으로 빈곤하여 충분성이 미흡하다.
- ② 소득이나 소비보다는 자산과세 위주로 되어 있고 그것도 거래과세 비중이 커서 부동산시장이나 거래가 위축될 경우 세수가 감소할 수 있어 안정성과 신장성에도 문제가 있다.
- ③ 수도권과 비수도권, 서울특별시의 강남과 강북 등 지역간에 재정격차가 심하여 부담보편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④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지방세의 세목 설정은 물론, 과세표준의 산정, 감면범위, 징수방법 등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모두 법률에 의하여 정해지고 있다.

04 우리나라의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11년, 국민참여예산제도는 2018년에 각각 의무화되었다.
- ②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정부중심의 폐쇄적인 예산편성에서 벗어나 국민의 실질적인 예산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국회의 예산심의 및 의결과정과는 무관한 제도이다.
- ③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경우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수렴된 주민의 의견서를 반드시 예산안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 ④ 주민참여예산과 마찬가지로 국민참여예산제도의 경우도 수렴된 국민들의 의견서를 국회로 제출하는 예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회 정답 및 해설

01	②	02	③	03	①	04	②	05	②
06	④	07	③	08	③	09	④	10	②
11	③	12	④	13	③	14	②	15	③
16	④	17	③	18	①	19	③	20	②

01

★★

차별적 타당성은 서로 다른 이론적 구성개념을 나타내는 측정지표 간의 관계를 의미하며, 서로 다른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지표 간의 상관관계가 낮을수록 차별적 타당성이 높다.

- ☑ ① [○] 수렴적 타당성은 동일한 개념을 다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했을 때 측정된 값 간의 상관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수렴적 타당도가 높다.
- ③ [○] 기준타당성은 하나의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시험성적)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측정한 결과(근무성적 등)를 비교했을 때 도출된 연관성의 정도이다.
- ④ [○] 내용타당성은 시험내용과 능력요소가 얼마나 부합되는지의 정도를 의미한다.

☞ 시험의 타당도

기대구-기예동-구수차

구분	개념	판단기준	검증방법
기준 타당도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이나 실적' 예측 여부	시험성적 = 근무성적	예측적 검증(합격자) 동시적 검증(재직자)
내용 타당도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요소' 측정 여부	능력요소 = 시험내용	내용분석
구성 타당도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요소와 관련된다고 믿는 '이론적 구성 요소' 측정 여부	시험내용 = 이론적 구성요소	논리적 추론 ① 수렴적 타당성 - 동일한 개념을 다른 방법으로 측정 ② 차별적 타당성 - 상이한 개념을 동일 방법으로 측정

02

★★

신기술 서비스·제품을 규제할 때에는 출시 전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 출시 후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방식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규제샌드박스라고 한다. 규제 없는 모래밭에서 안전하고 자유롭게 신기술을 적용하여 신제품을 출시해보라는 취지의 제도이다.

- ☑ ① [○]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정된 네거티브 규제방식에 대한 올바른 설명
- ② [○]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정된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올바른 설명
- ④ [○]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정된 규제일몰주의(5년)에 대한 올바른 설명

03

★★★

①

ㄱ, ㄴ, ㄹ만 옳다.

- ☑ ㄱ [○] Salomon의 정책수단유형에 따르면 경제적 규제는 정부소비, 공기업, 법 등과 함께 직접성이 높은 정책수단에 해당한다.
- ㄴ [○] 조세지출이란 조세감면에 의한 간접지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정인에게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정책을 집행하는 간접적인 수단이다.
- ㄷ [×] 바우처(이용사은권, 증서, 쿠폰방식)는 시민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경쟁을 촉진시키는 정책수단으로 최근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정책수단은 아니며 역사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가장 역사가 길고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정책수단은 정부소비방식(정부기관, 직접시행)이다.
- ㄹ [×] 베딩(Vedung)은 정책수단을 강제성의 정도에 따라 규제적 도구(채찍), 경제적 도구(당근), 정보적 도구(설교)로 구분하였다.
- ㄹ [○] 바우처, 보조금, 사회적 규제 등은 직접성이 높지 않은 정책수단으로 거버넌스의 출현과 함께 강조되고 있다. 공적 보험은 직접적인 수단으로 보는 입장과 간접적인 수단으로 보는 입장 두 가지 견해가 있다.

☞ Salomon의 정책수단 유형(직접성 기준)

최근 문헌

직접성	수단	개념
간접적 수단	손해책임법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보조금	서비스가 기술적으로 복잡시 생산자에게 현금 또는 현물 지원
	지급보증	정책집행에 필요한 자금의 지급을 정부가 보증
	기업지원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의 자금 지원 등
	바우처	빈곤층 소비자에게 쿠폰(이용사은권)을 지급
	조세지출	조세감면에 의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집행을 지원
	계약(위탁)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에 의하여 서비스생산을 민간에게 위탁
	사회 규제	바람직한 사회질서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
	벌금	집행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금전적 패널티 부과
	부과금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해 불이익(부담)을 주는 교정적 조세
직접적 수단	공적보험 ¹⁾	유사시에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보험에서 보험금 지급
	직접대부	정부가 집행에 필요한 자금을 민간에게 직접 대출
	경제규제	민간의 경제활동을 직접 규제(인허가 등 진입규제)하여 집행
	공공정보	정부가 민간에게 공적정보를 직접 제공(공개)
	공기업	정부가 소유한 기업에 의하여 정책을 집행
	정부소비	정부가 공적조직을 만들어 예산으로 직접 시행

1) 전통문헌은 공적보험을 직접성이 높은 수단으로 분류한 바 있다.

대소정(보)공경

04

★★

②

보통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한다. 다만, 자치구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와 합산하여 산정한 후, 그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교부한다.

- ☑ ③ [○] 행안부장관은 특별교부세에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신청에 의하여 심사·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 기준에 의해 지급한다.

☞ 지방교부세의 종류

보통안부

종류	개념	재원	용도
보통 교부세	재정력지수(기준재정수입액/기준재정수요액)가 1 이하인 자치단체에 교부	[내국세총액의 19.24% + 정산액]의 100분의 97	일반 재원

블랙스버그 선언(Blacksburg Manifesto)

국가의 역할이나 행정의 정당성을 부정하다시피하는 후기관료제의 모형이나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반발, 일종의 실행정론 정신의 계승임. 행정의 정당성을 회복하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1980년대 중반의 미국 내 학문적 개혁운동으로 웜슬리(Wamsley), 굿셀(Goodsell), 울프(Wolf), 로어(Rohr), 그리고 화이트(White)가 1987년 공동선언함.

주의

[행정이론과 '재창조-재발견']

- 시민재창조 : 거버넌스
- 정부재창조 : 신공공관리론, 기업형정부
- 정부재발견 : 행정재정립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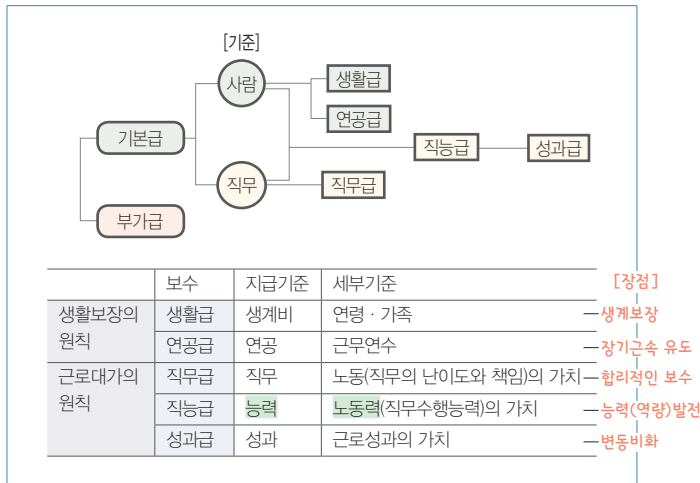
19

★★

직능급은 연공주의보다는 실적주의를 강조하는 경우 활용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직접적인 성과평가와는 다른 직무역량평가를 통해 보수수준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성과급과 다르다.

- ☑ ① [○] 생활급에 대한 맞는 설명이다.
 ② [○] 근속급에 대한 맞는 설명이다.
 ④ [○] 성과급에 대한 맞는 설명이다.

보수구조 및 개별보수체계



20

★★

이해충돌 위반행위는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도 신고할 수 있으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및 그 감독기관에도 신고할 수 있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8조).

- ☑ ①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2021. 5. 18. 제정되어 1년 뒤인 2022. 5. 19. 시행되었다.
 ② [○] 이해충돌은 그 특성에 따라 실제적 충돌(이미 발생한 이해충돌), 외견적 충돌(가능성 있는 이해충돌), 잠재적 충돌(미래에 예견되는 충돌)로 분류할 수 있다.
 ③ [○] 이해충돌의 원칙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다. 이해충돌 방지제도는 공익과 사익이 충돌되는 상황을 회피하고자 하는 제도로 누구든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스스로 심판관이 될 수 없다는 Coke의 원칙에 근거한 제도이다.

이해충돌의 유형

실외장-과가미

실질적 이해충돌	현재도 발생하고 있고 과거에도 발생한 이해충돌
외견상 이해충돌	공무원의 사익이 부적절하게 공적 의무의 수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부정적 영향이 현재화한 것은 아닌 상태의 이해충돌
잠재적 이해충돌	공무원이 미래에 공적 책임에 관련되는 일에 연루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해충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 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

TEST STATS

	9급	7급
난이도	상 중 하	상 중 하
예상 평균점수	69.4점	73.5점
상위 20% 예상점수	78.3점	84.5점

★★

ㄱ, ㄴ만 옳다.

- ☑ ㄱ [○] Lowi는 하나의 정치적 모형이 모든 정책을 지배할 수 없으며 정책유형별로 정책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특징이 달라진다고 보면서 다원론(규제정책)과 엘리트론(재분배정책)의 통합을 시도하였다.
- ㄴ [×] 알몬드와 파우얼(Almond & Powell)에 따르면 조세 및 부담금, 공무원 모집 등은 **추출정책**에 해당한다.
- ㄷ [×] 로위(Lowi)는 보수나 연금에 관한 정책을 **구성정책**으로 분류한다.
- ㄹ [×] Lowi의 분류는 구성정책이 나중에 추가되는 등 동일한 분류기준을 사용하지 않아 분류된 정책들이 상호배타적이지 못하고 정책분류에서 사용한 **기본개념들의 모호함**이 **조작화(operationalization)**를 어렵게 한다는 약점을 지닌다.
- ㅁ [○] 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에 따르면 규제정책 중 본질적이고 일반적인 규제는 보호적 규제정책이라고 하였다.

☞ Lowi의 정책유형

구분	개념	예	특징	주도
구성정책	행정체제 정비	정부기관 신설	게임의 법칙	정당
배분정책	서비스 배분 (개별화 정책)	SOC, 보조금 등	포크베일, 로크롤링	의회
규제정책	제약과 통제	진입규제, 독과점규제	다원주의 (포획, 지대추구)	이익집단
재분배정책	부의 이전	사회보장정책	엘리트이론	엘리트

★★

ㄷ, ㄴ만 틀리다.

- ☑ ㄱ [○] 옴부즈만(Ombudsman)은 1809년 스웨덴에서 최초 도입되었으며 이는 스웨덴어로 대리자·대표자를 의미한다.
- ㄴ [○] 옴부즈만은 영국과 미국의 경우 민정관 또는 호민관, 행정감찰관이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 ㄷ [×] 우리나라의 옴부즈만 제도는 1994년 신설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시초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위원회통폐합방침에 따라 국가청렴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등과 합쳐져 **지금의 국민권익위원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가 되었다.
- ㄹ [○] 옴부즈만은 의회 또는 정부에 소속되어 있으며, 의회소속형(스웨덴, 영미 등)의 경우 의회가 임명하고 정부소속형(한국, 프랑스 등)의 경우 정부가 임명하지만 임명하는 기관으로부터 직무상으로는 엄격히 독립되어 국정을 통제한다.
- ㅁ [×]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제도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아직 활발하게 시행되지 않고 있다.
- ㅂ [○] 우리의 경우 유럽보다 임기가 짧고 헌법상 기구가 아니어서 조직적 안정성이 부족한 편이다.

☞ 옴부즈만의 일반적인 특징

- ① 의회 소속
- ② 불법행위(합법성)는 물론 부당행위(합목적성)도 대상
- ③ 간접적 통제 : 무효·취소 불가
- ④ 작권에 의한 조사
- ⑤ 신속한 처리와 저렴한 비용 : 절차는 비공식적, 조사는 공개적
- ⑥ 독립된 헌법기관 : 입법부나 사법부도 통제의 대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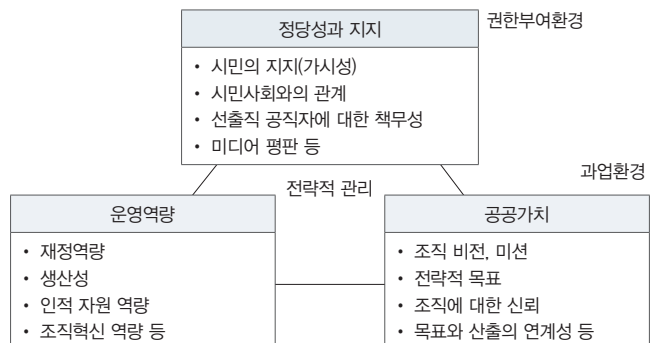
베리 보우즈만(B.Bozeman)은 공공가치실패론(2002)에서 **시장메커니즘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본질적 가치를 제공하지 못하는 현상을 “공공가치 실패”로 정의하였다.

- ☑ ② [○] 베리 보우즈만(B.Bozeman)은 공공가치실패론에서 시장에서 공급될 수 없는 대표적인 공공가치들로 인간의 존엄, 시민참여, 지속가능성, 개방성과 기밀성, 타협, 온전성, 강건성 등을 제시하였다.
- ③ [○] 공공가치관리론에서는 신공공관리론과 달리 공익을 개인선호의 집합이 아닌 속의를 가진 공공의 선호로 본다.
- ④ [○] 무어(Moore)는 공공가치 창출론(1995)에서 공공가치 창출을 위한 전략적 삼각형 모형을 제시하였다. 전략적 삼각형모형이란 ① 정당성과 자원의 확보, ② 공적 가치의 형성, ③ 운영역량의 형성을 말한다.

☞ 공공가치관리론의 핵심 내용

공공가치실패론 (B.Bozeman, 2002, 2007)	① 협의(2002) : 시장메커니즘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본질적 가치(공익, 정의, 형평 등)를 제공하지 못하므로 정부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 ② 광의(2007) : 시장과 공공부문에서 공공가치가 창출되지 못하는 현상 ③ 공공가치실패 진단기준으로 공공가치지도그리기(PVM)모형 제시
공공가치창출론 (Moore, 1995)	① 민주적으로 선출되어 정당성을 부여받은 정부관리자들이 공공자선(정부조직, 정부예산 등)을 활용하여 시장에서는 공급될 수 없는 공공가치(공익, 정의, 형평 등)를 적극 창출·제공해야 한다는 이론 ② 공공가치창출을 위한 전략적 삼각형(정당성 및 지지, 운영역량, 공공가치) 모형과 순공공가치의 극대화를 위한 공공가치 회계모형 제시

☞ 전략적 삼각형 모형



★★

③번 지문 이외는 **기관통합형의 기본특징**이다. 기관대립형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이원적으로 구성해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해 지방자치를 수행하는 제도이다. ④의 경우 미국 연방정부는 대통령 중심제이지만 주 및 지방정부는 지역별로 다양하나 대체로 기관통합형이 많다.

★★★

ㄴ, ㄴ만 옳다.

- ☑ ㄱ [×] 이념형 관료제는 조직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순환근무보다는 한 가지 일만 반복적·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엄격한 분업의 원리를 중시**한다.
- ㄴ [○] 막스 베버(Max Weber)의 관료제 이념형(ideal type)은 권위의 3가지

대 / 한 / 민 / 국 / 대 / 표 / 행 / 정 / 학

행정학의 선을 또한번 새롭게 긋다

고객 HOT LINE

온라인 강의 gong.conects.com
www.kaspa.co.kr TEL. 02-532-5280~1

오프라인 강의 공단기고시학원 TEL. 02-812-6521

펴낸날 2025년 8월 1일

펴낸이 김중규

펴낸곳 (주)카스파

주소 서울시 서초구 동광로39길 46(반포동) 해나하우스 B동 601호

도서문의 TEL. 02-532-5314

등록번호 제2015-000214호

